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62
----------	-----

발의연월일 : 2024. 6. 19.

발 의 자 : 구자근 · 권영세 · 박준태
강대식 · 인요한 · 박덕흠
유상범 · 김성원 · 김선교
김도읍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국가핵심기술 및 보유기관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없어 국가핵심기술 관리에 허점이 있음.

또한,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에 대한 불법해외인수·합병이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지·금지·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과 관련된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침해신고 관련기관을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마. 국가핵심기술 판정, 보유기관 등록, 시정명령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안 제34조).

바. 제9조의2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3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을 아니한 경우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되도록 함(안 제39조).

사.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4로 하고,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신청이 없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 등을 통하여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신청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판정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①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의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갖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을 통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자료·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3. 대상기관이 국내법인·기업 등에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갖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말소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개선권고)”를 “(개선권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개선권고를”을 “시정명령을”로, “개선권고의”를 “명령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및 제3항에”를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항에”로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에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

제39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9항 및 제11조의2제1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7.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이행강제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에 대한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1,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확인된 대상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제9조의3의 개정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 ⑤ (생략)</p> <p>⑥ <u>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u></p> <p>⑦ (생략)</p> <p><u><신 설></u></p>	<p>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⑥ (현행 제7항과 같음)</p> <p><u>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신청이 없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 제15조, 제17조의 규정 등을 통하여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기관</u></p>

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신청기관의 장 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판정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의 등록 등) ① 기업·연구기관
· 전문기관·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의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
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
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
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
당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
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
은 경우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
심기술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
를 갖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
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을 통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자료·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3. 대상기관이 국내법인·기업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갖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말소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

<p>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 공개) (생략)</p> <p>제13조(개선권고) ①·② (생략)</p> <p><신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를 한 경우 해당 개선 권고의 주요 내용 및 이유, 대상 기관의 조치결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p>	<p>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의4(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 공개) (현행 제9조의2와 같음)</p> <p>제13조(개선권고 등) ①·② (현 행과 같음)</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 및 제2항의 개선권고에 대하 여 확인·점검을 할 수 있고,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기 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p> <p>④ ----- 제3항 ----- 시정명령을 ----- 명령의 ----- -----.</p> <p>⑤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제2</p>
---	--

<p><u>권고 및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 조사) ①·② (생략)</p> <p><u><신설></u></p> <p>③ (생략)</p> <p>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2.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항에 -----</u> <u>-----.</u></p> <p>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34조(비밀유지의무) ----- ----- ----- -----.</p> <p>1.·2. (현행과 같음)</p> <p>2의2. <u>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u></p> <p>2의3. <u>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u></p>
--	---

<p>3. · 3의2. (생략)</p> <p><u><신설></u></p> <p>4. ~ 10. (생략)</p> <p>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u><단서 신설></u></p> <p>1. ~ 3.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② (생략)</p> <p><u><신설></u></p>	<p>3. · 3의2. (현행과 같음)</p> <p><u>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u></p> <p>4. ~ 10. (현행과 같음)</p> <p>제39조(과태료) ① ----- ----- -----.</p> <p><u>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하지 아니한 자</u></p> <p><u>5.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u></p> <p><u>6. 제11조제9항 및 제11조의2제1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u></p> <p><u>7.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u></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40조(이행강제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중지·금지·</u></p>
---	---

원상회복 등의 조치에 대한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1,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